

보도 일시	2022. 8. 30.(화) (국무회의 종료 후)	배포 일시	2022. 8. 30.(화)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채은 (044-201-6330)
		담당자	서기관 이승현 (044-201-6337)

##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안전·환경서비스·미래** 중심 투자

-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 편성
- 새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적극 뒷받침

- ◆(안전) 도시침수·홍수, 먹는 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 최우선 확보
- ◆(환경서비스)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물 복지 등 국민 환경기본권 충족
- ◆(미래) 탄소중립 달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녹색투자 강화

### < 예산안 개요 및 기본방향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예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환경부 소관))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 [국민께 드리는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 둘째,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 셋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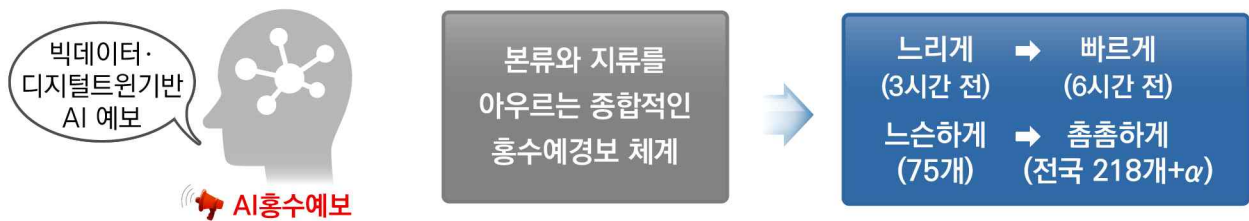
## < 2023년 분야별 중점 투자 내용 >

### 1. 재해·재난,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예방·방지】

□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모니터링)-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

-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 수자원/수재해 위성개발: ('22) 75억 → ('23) 255억 원, < 240% ↑ >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22) 6억 → ('23) 54억 원, < 800% ↑ >
- 기후위기대응 홍수 방어능력개발(R&D): ('22) 30억 → ('23) 85억 원, < 183.3% ↑ >

-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하고, 전국 유역(지방)환경청에 홍수대응상황실 구축(9개소)과 국가하천 전 구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730개) 등을 지원한다.

- 소형 강우레이더 구축 및 개선: ('22) 59억 → ('23) 79억 원, < 33.9% ↑ >
- 유역·지방환경청 홍수상황실 구축: ('22) - → ('23) 26억 원, < 신규 >

-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총사업비 6,000억 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 대심도 하수 저류시설 구축: ('22) - → ('23) 54억 원, < 신규 >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22) 964억 → ('23) 1,493억 원, < 54.9% ↑ >
- 하수처리장 설치·확충: ('22) 4,964억 → ('23) 7,418억 원, < 49.4% ↑ >

-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방지시설 (총사업비 3,000억원) 설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한다. 또한, 전국 국가 하천 범람 위험지역의 제방 보강 등을 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910억원 증액 편성하여 홍수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22) - → ('23) 30억 원 < 신규 >
- 국가하천정비: ('22) 4,100억 → ('23) 5,010억 원, < 22.2% ↑ >

### 【먹는 물 안전】

- 수돗물 유충, 취수원 조류(녹조) 발생 등 국민들의 먹는 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 수돗물에 소형생물(유충)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하고, 공공수역 취·양수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22) - → ('23) 227억 원 < 신규 >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22) 712억 원 → ('23) 849억 원, < 19.2% ↑ >

###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

- 야생멧돼지를 비롯해 검역을 거치지 않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상시관리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책임질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본격 착공을 지원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22) 190억 → ('23) 312억 원 < 64.2% ↑ >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23) 250억 원

## 【화학물질 안전 관리】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계 제도이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 안전진단 지원, 지역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에도 지속 지원한다.

-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22) 472억원 → ('23) 567억 원 < 20.1% ↑ >
- 화학제품 안전관리: ('22) 303억원 → ('23) 345억 원 < 13.9% ↑ >
-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 ('22) 22.2억 → ('23) 49.7억 원 < 123.9% ↑ >

## 2.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 및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 맞춤 대응

### 【맑은 공기】

-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3만대, 수소차 1.7만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6.2만기를 확충한다.
  -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한다.

- 무공해차 보급사업: ('22) 2조 4,078억 → ('23) 2조 7,402억 원 < 13.8% ↑ >
-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2) 4,202억 → ('23) 5,189억 원, < 23.5% ↑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2) 3,360억 → ('23) 3,987억 원, < 18.7% ↑ >

- 국민 활동공간과 밀접한 생활주변 공기질 개선도 추진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의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시설 15,625대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23년 5,000대)한다.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GHP 냉난방기 지원): ('22) 47억 → ('23) 87.5억 원 < 86.2% ↑ >

## 【쾌적한 생활환경】

- 우리가 쓰고 버린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내년에 약 20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개), 소각시설(9개)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 연말('22.12.2.)에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2년) 1,350억 → ('23년) 1,468억 원 < 8.7% ↑ >
-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22년) - → ('23년) 87.5억 원 < 신규 >

## 【자연·생태】

-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 생태계 훼손지 복원(22개소), 도시 생태축 복원(16개소)을 통해 녹색 공간의 체계적 복원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관리 대상 지자체를 확대('22년 118개 → '23년 141개 지자체)한다.

- 생태계 훼손지 복원(22개소, 155억 원), 도시 생태축 복원(16개소, 216억 원)
-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22) 63억 → ('23) 67억 원 < 6.3% ↑ >

- 곰 사육 종식 합의와 계획 확정('22.1월)에 따라, 사육 포기된 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2곳(서천, 구례)을 신규 조성하고, 시설 완공 전까지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에 사료비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 사육곰 및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 ('23년) 76억 원(서천), ('23년) 35억 원(구례)
- 곰 사육 포기 농가 유지관리비 지원: ('23) 2.2억 원 < 신규 >

- 또한, 국립공원 내에 있는 노후화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탐방 안내소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정비(348억 → 924억 원)한다.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22년) 2,257억 → ('23) 2,864억 원 < 26.9% ↑ >
- (야영장 정비) 218억 → 329억 원 < 50.9% ↑ >
- (주차장 정비) 46억 → 222억 원 < 382.6% ↑ >
- (공중화장실 정비) 51억 → 288억 원 < 464.7% ↑ >
- (탐방안내소 정비) 33억 → 85억 원 < 157.6% ↑ >

## 【환경보건】

-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도 지속한다.
- 난개발 지역('23년 26개), 화력발전소 등 환경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오염 정화를 지원하고, 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진료지원(300여명) 등에도 지속 투자한다.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대책: ('22년) 47억 → ('23년) 49억 원 < 4.3% ↑ >
- 환경성질환 주민건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22년) 9.5억 → ('23년) 9.5억 원
- 사회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 ('22년) 10억 → ('23년) 10억 원

## 【물 복지】

- 국민들의 물 복지 제고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 4건을 신규 추진하고,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22년) 12개 시군 20개소 → ('23년) 13개 시군 28개소(신규 13개소)

- 금산무주(Ⅱ) 광역상수도(총사업비 878억): ('23) 설계비 3억 원 < 신규 >
- 전주권 광역상수도 복선화(총사업비 3,023억): ('23) 설계비 5억 원 < 신규 >
- 수도권(V)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총사업비 1,615억): ('23) 설계비 2억 원 < 신규 >
- 아산공업용수도(Ⅱ) 복선화(총사업비 551억): ('23) 설계비 2억 원 < 신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2) 271억 → ('23) 452억 원, < 66.8% ↑ >

## 【사회 취약계층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서비스】

- 폭염·폭우·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기후적응 불평등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에 약 3,000개소('22년 대비 약 2배) 마을단위 지역의 취약 가구 등에게 폭염·한파 쉼터, 지붕개량, 창호 개선 등을 지원한다.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기후기금): ('22년) 328억 → ('23년) 455억 원 < 38.7% >



### 3.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 뒷받침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

#### 【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22년 159개사 → '23년 230개사)한다.

-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22) 99개사 979억원 → ('23) 140개사 1,388억원
- 스마트 생태공장: ('22) 60개사 606억원 → ('23) 90개사 909억원

- 모태펀드, 저리융자를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5조원, 금리 약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22) 200억 → ('23) 450억 원, < 125.0% ↑ >
- 친환경설비투자(장기저리융자): ('22) 500억원 → ('23) 1,000억원 < 100% ↑ >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22) 143억 → ('23) 243억 원 < 69.9% ↑ >

#### 【국민실천, 지자체 동참】

-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체험관을 구축·정비('22년 1개 → '23년 3개)한다.
- \* ('22) 탄소포인트제 250만 가구, 자동차 5만 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10만 명 → ('23) 탄소포인트제 250만 가구, 자동차 6만 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40만 명
- 또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17개→37개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개소, 공사비)을 지원한다.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탄소포인트제): ('22) 151억원 → ('23) 240억원
- 탄소중립 체험 인프라: ('22) 12억원(1곳, 해남) → ('23) 45억원(3곳, 해남 + 2곳(개선))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22) 17개소 17억원 → ('23) 37개소 54억원
- 탄소중립 그린도시: ('22) 2개소 시행계획 19억원 → ('23) 2개소 조성비 24억원

## 【탄소흡수원, 순환경제】

□ 탄소 흡수원,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 대표적 탄소 저장고인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22) 35억 → ('23) 49억 원, < 40.0% ↑ >
- 습지보전관리: ('22) 296억 → ('23) 316억 원, < 6.8% ↑ >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 시설(2곳),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조성도 지속하여 지원한다.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22) 10억 → ('23) 18억 원, < 80.0% ↑ >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신규): ('23) 2곳 10억원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22) 365억 → ('23) 371억 원(포항, 부산, 제주)

## 【환경기술 연구개발】

□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25년, 324.5억 원),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27년, 400억 원, 신규) 등 핵심 환경기술의 대외 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4년, 360억 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26년, 428억 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25년, 492억 원) 등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지속한다.
- 또한,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량 산정·관리를 위해 위성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27년, 414억 원)에도 신규 투자한다.

-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R&D): ('22) 82억 → ('23) 97억 원, < 18.3% ↑ >
- 물·대기 환경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R&D): ('23) 50억 원, < 신규 >
- 미래 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R&D): ('22) 41억 → ('23) 80.5억 원, < 96.3% ↑ >
- 폐자원 활용에너지 전환 실증기술개발(R&D): ('22) 36억 → ('23) 63억 원, < 75.0% ↑ >
-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R&D): ('23) 60억 원, < 신규 >



## < 향후 계획 >

-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면서,
-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 2023년도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편성현황.
  3. 인포그래픽(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 편성).
  4. 2023년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사업.
  5. 2023년도 환경부 주요 사업 설명자료. 끝.

담당 부서 < 예산 총괄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채은 (044-201-6330)
		담당자	서기관 이승현 (044-201-6337)
		담당자	주무관 주우민 (044-201-6342)
< 기후대응기금 총괄 >	기후탄소정책실 기후전략과	책임자	과 장 김정환 (044-201-6640)
		담당자	사무관 박혜진 (044-201-6652)

# 붙임 1

##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예 산

(단위 : 억원, %)

부 문	'22년		'23년안	증감	
	본예산(A)	2회 추경	본예산(B)	(B-A)	%
<b>합 계</b>	<b>115,700</b>	<b>111,586</b>	<b>118,463</b>	<b>2,763</b>	<b>2.4</b>
◎ 물환경	33,645	33,290	32,866	△778	△2.3
◎ 수자원	16,055	15,929	16,518	463	2.9
◎ 기후대기·환경안전	42,295	38,694	44,632	2,336	5.5
- 기후변화	276	274	351	75	27.1
- 대기환경	38,639	35,046	40,814	2,175	5.6
- 환경보건	3,380	3,374	3,467	87	2.6
◎ 자원순환·환경경제	10,532	10,523	10,242	△290	△2.7
- 자원순환	3,038	3,035	3,201	163	5.4
- 환경경제	7,494	7,488	7,042	△453	△6.0
◎ 자연환경	8,336	8,318	9,417	1,081	13.0
◎ 환경일반	4,675	4,670	4,786	111	2.4
◎ 기 타	163	163	1	△161	△99.1

### 기 금

(단위 : 억원, %)

구	분	'22년	'23년안	증감	
				(B-A)	%
<b>합</b>	<b>계</b>	<b>16,555</b>	<b>18,808</b>	<b>2,253</b>	<b>13.6</b>
한 강 수 계 관 리 기 금		5,300	5,635	336	6.3
낙 동 강 수 계 관 리 기 금		2,444	2,372	△72	△2.9
금 강 수 계 관 리 기 금		1,269	1,308	39	3.1
영 산 강 섬 진 강 수 계 관 리 기 금		891	914	23	2.5
석 면 피 해 구 제 기 금		237	331	94	39.7
기 후 기 금 (환경부 소관)		6,415	8,248	1,834	28.6

□ 35개 사업 총 8,248억원(R&D 12개 678억원 포함)

<p><b>온실가스 감축지원</b> (3,918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열분해시설 설치(18억원)</li> <li>-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1,617억원)</li> <li>-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909억원)</li> <li>-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639억원)</li> <li>-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 관리체계 구축(50억원)</li> <li>- 도시생태축 복원사업(216억원)</li> <li>-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49억원)</li> <li>- 습지보전관리(316억원)</li> <li>-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104억원)</li> </ul>
<p><b>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b> (2,766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450억원)</li> <li>-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243억원)</li> <li>- 친환경설비투자(1,000억원)</li> <li>-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225억원)</li> <li>- 녹색융합기술인재 양성(459억원)</li> <li>-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371억원)</li> <li>-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3억원)</li> <li>-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10억원)</li> <li>- 탄소저장물 생산 지원(5억원)</li> </ul>
<p><b>공정한 전환</b> (728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455억원)</li> <li>- 탄소중립그린도시(24억원)</li> <li>- 환경교육강화(9억원)</li> <li>-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240억원)</li> </ul>
<p><b>제도· 기반구축 지원</b> (836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구축(158억원)</li> <li>- 플라스마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사업 (R&amp;D, 35억원)</li> <li>-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R&amp;D, 138억원)</li> <li>- 대규모CCS통합실증및CCU상용화기반구축사업(R&amp;D, 7억원)</li> <li>-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개발(R&amp;D, 19억원)</li> <li>- 폐플라스틱활용원료·연료화기술개발사업(R&amp;D, 77억원)</li> <li>-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개발(R&amp;D, 66억원)</li> <li>- 야생생물 유래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사업(R&amp;D, 51억원)</li> <li>- 대기환경관리기술사업화 연계기술개발사업(R&amp;D, 76억원)</li> <li>- 습지생태계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R&amp;D, 41억원)</li> <li>- 폐자원 활용 에너지전환 실증기술개발사업(R&amp;D, 63억원)</li> <li>-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사업화 연계기술개발사업(R&amp;D, 45억원)</li> <li>-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R&amp;D, 60억원)</li> </ul>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 편성**  
**국민안전 확보 · 환경기본권 강화 ·**  
**탄소중립 실현에 중점 투자**

**총지출 : 13조 7,271억 원 (전년 대비 3.8% ↑)**  
 예산 : 11조 8,463억 원 (전년 대비 2.4% ↑) / 기금 : 1조 8,808억 원 (전년 대비 13.6% ↑)

**재난 · 질병 ·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재해 · 사고로부터 안심 물관리**

- 빗물 저류터널 설치(85억원, 신규)
-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227억원, 신규)



**아생동물 전염병 예방**

-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312억원, 64.2% ↑)
- 아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250억원, 작공·소요 반영)



**화학물질 안전 관리**

- 화학제품 안전관리사업(345억원, 14% ↑)
-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567억원, 20.1% ↑)

**대기 · 물 · 자연 생태계 등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맑은 공기 · 쾌적한 생활환경**

-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3조2,591억원, 15.2% ↑)
- 1회용컵 무인회수기(87.5억원, 신규)



**맞춤형 자연 · 생태서비스 제공**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279억원, 24.8% ↑)
- 국립공원 탐방편의시설 정비(924억원, 165.5% ↑)



**취약지역 · 취약계층 환경서비스**

-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100억원, 102% ↑)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대책(49억원, 4.3%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1,388억원, 41.8% ↑)
- 스마트 생태공장(909억원, 50% ↑)



**탄소중립 국민실천 및 지자체 통합**

- 탄소포인트제(240억원, 58.9% ↑)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54억원, 217.7% ↑)



**순환경제, 탄소흡수원**

-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18억원, 80% ↑)
- 탄소흡수원 · 습지보전(365억원, 10.3% ↑)

# 붙임 4

## 2023년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사업

분야	주요 사업	'22년	'23년 정부안
국민안전 확보	도시 침수대응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침수방지시설)	-	3개소 (서울 광화문·강남역, 도림천)
	소형 강우레이더	누적 2개소	누적 4개소 (부산, 울산 준공)
	홍수대응상황실	5개소 (세종, 4대강 홍수통제소)	14개소(+9개소) (유역·지방환경청 등)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정밀여과장치 설치)	-	46개 지자체, 153개 정수장
환경기본권 환경서비스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물량/단가)	(지자체) 16.5만대/6백 -	(지자체) 15.1만대/5백 (민간) 6.5만대/5백
	수소 승용차 구매보조(물량/단가)	(지자체) 1.8만대/22.5백	(지자체) 1.6만대/22.5백
	수소 버스 구매보조(물량/단가)	( 시내 ) 300대/150백 ( 광역 ) 40대/200백	( 시내 ) 400대/210백 ( 광역 ) 300대/260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물량/단가)	(5등급) 35만×1.6백×60% -	(5등급) 25만×1.6백×50% (4등급) 9만×4백×50% (건설기계) 1만×3.7백×5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43개소 (매립지시설) 10개소 (친환경에너지타운) 7개소	(소각시설) 48개소 (매립지시설) 13개소 (친환경에너지타운) 13개소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	민간 1,000대 공공 500대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대상 지자체	118개	141개
	국립공원 탐방시설 정비	야영장 16개 주차장 16개 화장실 26개 안내소 7개	야영장 36개 주차장 25개 화장실 75개 안내소 10개
탄소중립 녹색투자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99개사	140개사
	스마트 생태공장	60개사	90개사
	친환경설비투자(장기저리용자)	500억원	1,000억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10만명	40만명

1. [신규]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2. [신규]광화문·강남역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3. 국가하천정비
4. 무공해차 보급
5.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6.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조기폐차 지원)
7. 실내 공기질관리 종합대책
8.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9.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10. 친환경 설비투자 지원
11.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R&D)
12. [신규]정수장 소형생물(유충 등) 대응체계 구축
13. [신규]1회용품 보증금제 관련 무인회수기 설치
14.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시범사업)
15. [신규]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기후대응기금)
16. 국립공원 탐방시설 정비 사업
17.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몰수 사육 곰 보호시설 설치)
18.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기후대응기금)
19.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기후대응기금)
20.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기후대응기금)



# 1. (신규)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수자원관리과 권훈오사무관, 044-201-7658)

## 사 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인프라)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 방수로,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등 3곳의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반복 침수 지역인 도림천 일대 홍수예방을 위해 도림천 및 대방천과 한강을 잇는 대심도 지하방수로(빗물 배수시설) 설치
- (사업규모) 도림천: 보라매공원~한강(샛강), 직경 8.5m, 길이 3.0km  
대방천: 장승배기역~한강(샛강), 직경 4.0m, 길이 2.2km
- (총사업비) 3,000억원(국고 750억원, 지방비 2,250억원)
- (사업기간) '23년~'27년(5년간)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	3,031	3,031	순증

### □ 기대 효과

- 신속한 홍수 배출로 도림천 주변지역(동작, 관악) 침수피해 방지

## 2. 광화문·강남역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생활하수과 오지혜 사무관, 044-201-7025)

### 사 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강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높은 도시화율과 과거 설치된 하수도의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빗물이 하천으로 빠르게 빠지지 못하고 침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과거 서울시 신월동 일대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으로 '10년 9월 집중호우 시 약 6,000개 주택 등 건물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13.5월부터 지하 40m에 깊이에 약 32만㎡을 저류했다가 하천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였고, 첫 시험가동을 한 '20.8월 이후부터는 과거와 같은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습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하수관로 개량 공사나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 강우에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도심 40~50m 지하에 대규모 터널을 뚫어 폭우시 빗물을 임시 저장하고 추후 방류하는 시설 설치
- (사업규모) 강남역 일대: 강남역~한강 3.1km, 직경 8.3m  
광화문 일대: 효자동~청계천 3.2km, 직경 5.5m
- (총사업비) 강남역 일대: 3,500억원(국고 875억원, 지방비 2,625억원)  
광화문 일대: 2,500억원(국고 625억원, 지방비 1,875억원)
- (사업기간) '23년~'27년(5년간)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하수관로정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	5,435	5,435	순증

### □ 기대 효과

- 도시침수 예방으로 국민생명 및 재산 보호

### 3. 국가하천정비

(하천계획과 박영상 사무관, 044-201-7704)

#### 사 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패턴 변화 및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 홍수량 및 홍수위가 증가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심화 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섬진강, 금강, 황강 등에 국가하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계획홍수위 이상 제방고 확보율)은 '20.12월 기준 79.75% 수준이므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가하천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정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23년부터 '26년까지 매년 필요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정비율을 90%까지 확보한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16~'25)」에 따라 국가하천에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제방축조·보축, 저류지 조성 등) 추진
- (사업대상) 국가하천 73개소(3,603km) \* '20.12월 한국하천일람 기준
- (사업기간) '95년 ~ '25년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16~'25) 기준
- (지원조건) 직접사업(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비 100%)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국가하천정비	410,028	501,030	91,002	22.2

#### □ 기대 효과

- 선제적 하천정비로 '26년까지 제방정비율을 90%까지 확보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4. 무공해차 보급

(대기미래전략과 김유란 사무관, 044-201-6881)

### 사 례

A사는 소형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작년에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 사정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에 구매를 포기했다. '23년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국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친환경차도 구매하고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B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된 청소차를 폐차하고, 신규 청소차를 구입하려다, 올해 연말 새롭게 수소 청소차가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23년에 수소 청소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지역내 환경오염 문제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 자금 지원
-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전기차 구매보조 수소차 구매보조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승용차: (지자체) 6→5백만원 (민간, 신설) 5백만원</li> <li>·전기버스: 70백만(전년동)</li> <li>·전기화물차: (소형) 14백만원(전년동) (중형, 신설) 50백만원</li> <li>·전기이륜차: 1.8→1.6백만원50%</li> <li>·수소승용차: 22.5백만원(전년동)</li> <li>·수소버스: ( 시내 ) 150→210백만원 (광역) 200→260백만원</li> <li>·수소화물: 250백만원(전년동)</li> <li>·청소차: 720백만원(전년동)</li> </ul>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합 계	2,182,766	2,740,224	557,458	25.5%
전기자동차 보급	1,719,000	2,093,000	374,000	21.8%
수소차 보급	454,505	633,400	178,895	39.4%
무공해차 운영비	9,261	13,824	4,563	49.3%

### □ 기대 효과

- 무공해차에 대한 다양한 수요 충족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
-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5.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대기미래전략과 김경미 서기관, 044-201-6897)  
(수소모빌리티혁신TF 이세호 사무관, 044-201-6884)

### 사 례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OO씨는 그동안 이용한 하이브리드차를 최근 다양하게 출시되는 전기차 또는 충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수소차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지만 집 또는 직장 근처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충분한지 확신이 없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근데,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예산도 대폭 늘리고,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하여 브랜드사업으로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여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자동차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 및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에서 직접 설치 또는 민간에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고, 수소충전소는 민간/지자체 구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환경공단(직접), 민간(보조)	· (급속) 350kW 150백만원, 100kW 40백만원 (민간 보조시 50%) · (완속) : 2백만원 이내 (정액보조)
수소충전소 설치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충전소 설치비 보조 : 승용 50%, 상용 70%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합 계	420,244	518,856	98,612	23.5
전기 충전인프라 설치·지원	200,500	302,500	102,000	50.9
수소충전소 설치	196,990	189,550	△7,440	△3.8
기타 운영비 등	22,754	26,806	4,052	17.8

### □ 기대 효과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수송부문 대기오염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6.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조기폐차)

(교통환경과 송태곤 수석전문관, 044-201-6929)

### 사 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OO씨는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아지고, 전기차의 충전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참에 오래된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러나, 경유탄소 배출량이 중고차값에 영향을 주면서 새 차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고민하던 차에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4등급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4등급차의 차량 가액을 온전히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무공해차 구매에 따른 추가보조금까지 지원 받게되어 새 차 구매에 대한 부담도 줄고, 대기환경개선 효과 역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노후경유차 폐차 시 차량 가액\*을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대상) (~<sup>22</sup>)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 (~<sup>23</sup>~)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非도로용 건설기계\*\*까지 확대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덤프·펌프·믹서트럭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원동기를 사용하여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4등급차	-	180,000 9만대 x 400만원 x 50%	180,000	순증
非도로용 건설기계	-	18,650 1만대 x 373만원 x 50%	18,650	순증
5등급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	336,000 35만대 x 160만원 x 60%	200,000 25만대 x 160만원 x 50%	△136,000	△40

### □ 기대 효과

- 매연저감장치 미장착 4등급 경유차 전체 84만대 조기폐차를 통해 초미세먼지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연간 약 470만톤 배출 저감

\* '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 수준



## 7.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생활환경과 윤재웅 사무관, 044-201-6798)

### 사 례

실내 공기질은 개선 추세이나 이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실내의 공기질 파악이 쉬워지면서 실내 공간의 공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부 차원의 공기질 관리가 필요할 때이다.

환경부는 2023년 실제 사람들의 거주환경을 동일하게 재현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실험동」을 준공한다. 이 실증실험동을 활용하여 실내공기질의 영향요인(건축자재 오염물질 등)과 실내오염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할 계획이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추진
  - (실증실험동 구축) 「실내환경 융합 실증실험동」 구축을 통해 실제 거주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내오염물질(미세먼지, 라돈, 빛공해 등) 평가
  -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실내 라돈 농도 측정·저감 컨설팅 및 라돈 고농도지역의 주택·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저감 시공 지원
- (지원대상) 실내오염물질(미세먼지, 라돈, 빛공해 등)에 노출된 일반국민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8,939	9,965	1,026	11.5

### □ 기대 효과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등의 주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개선을 통해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

## 8.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녹색전환정책과 금병욱 사무관, 044-201-6690)

### 사 례

국내외적으로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금융·투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자금 운용시 기후·환경요소를 고려하는 녹색금융 및 환경책임투자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EU 등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녹색금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이다.

환경부는 '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23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기업은 녹색금융 상품을 통하여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금리 혜택 등 그리니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여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녹색분류체계 시장 안착 + 녹색채권 등을 통한 대규모 민간자본의 참여 유도 →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적기 추진 도모
  - (지원내용) 녹색금융상품(녹색채권 등) 발행기관 금리 이차보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관 외부검토\* 비용 지원
- \* 녹색채권 등 발행 시 해당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사용 되는지 여부를 검토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녹색투자 비용 지원체계 구축)	-	13,680 녹색채권 이차보전 97억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30억원 외부검토 지원 10억원	13,680	순증

### □ 기대 효과

- 녹색경제활동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그리니엄\*을 형성하고, 회사채 부담을 낮춰 녹색채권시장 활성화 도모
- \* 그린(Green)과 프리미엄(Premium)의 합성어로 녹색채권의 금리가 일반채권보다 저리(0.2~0.3%p)로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관 지원 → 중견·중소기업 녹색자금 조달 촉진

## 9.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녹색산업혁신과 장화영 사무관, 044-201-6708)

### 사 례

반도체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세척수에 필요한 용수 확보와 폐수처리비용 때문에 고민 중인 상황에, 납품처에서 탄소배출 저감까지 요구하여 설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최근 매출액 저하로 환경관리 설비 투자를 망설이고 있던 중,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저감 및 종합환경관리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동종업계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았다.

A사장은 자원순환 및 폐수처리, 온실가스 저감분야에 신청하여 빗물 및 폐수 재이용 설비 도입, 고효율 펌프로의 교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사업계획서로 제출, 최종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A사장은 매년 폐수 60만톤 재이용, 에너지 158,472 kWh 저감 등 공장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여 납품 경쟁력 확보하고, 연간 총 11억 원의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얻게 되었고, 친환경 제조공장의 모범사례로서 타 업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온실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종합환경관리 설비 설치·전환 지원
  -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설비 구축, ③대기오염물질 저감, ④수질 오염저감, ⑤폐기물 저감, ⑥환경보건개선(악취, 소음 등), ⑦기타 친환경설비, ⑧스마트시스템(중기부), ⑨공장·에너지(산업부)
- (지원대상)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 화학제품, 비금속, 1차금속, 금속가공, 식료품, 플라스틱, 펄프종이, 기타기계, 자동차, 전자부품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중소 60%, 중견 50%)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60,600	90,900 90개소 x 10억원	30,300	50

### □ 기대 효과

- 온실가스 저감 및 오염물질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제조공장의 녹색전환 확산, 친환경 제조공장의 롤 모델 구축

## 10. 친환경설비투자

(녹색산업혁신과 양근미 사무관, 044-201-6706)

### 사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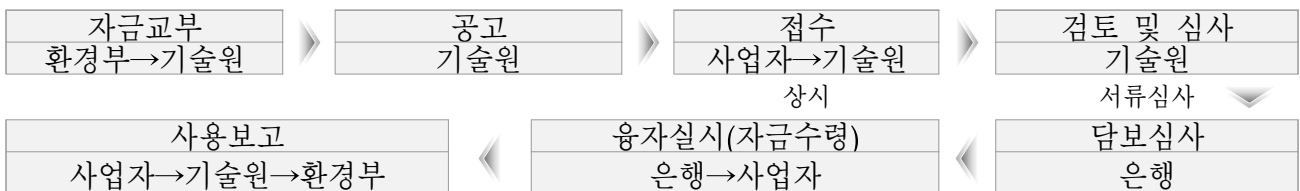
OO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환경씨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이 제조업·에너지산업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에, 온실가스 저감에 동참하고 사업운영비용도 절감하고자 노후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원료도 탄소가 덜 배출된다는 것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왕하는 것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므로 큰 돈이 필요한데,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부족해서 고민 중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후기금을 조성하여 기업당 최대 80억까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온실가스 저감 설비 교체 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하니 기대가 크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신증설을 위한 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 업체당 최대 80억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친환경설비투자(용자)	50,000	100,000	50,000	100

### □ 기대 효과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신규(교체)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 및 규모·재정·기술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

## 11.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R&D)

(물산업협력과 이재만 사무관, 044-201-7636)

### 사 례

반도체 제조에서 초순수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초순수를 생산하는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는 초순수 생산 기술의 자립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1년부터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의 생산을 위한 설계·시공·핵심장비에 대해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초순수 제조에 핵심적인 자외선 산화, 탈기막 장비를 국산화하고, 실증플랜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그간 해외에서 제조한 장비를 사용하던 초순수 생산 기업이 국산화된 장비를 사용하여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초순수 생산 플랜트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R&D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시설의 설계 및 운영 기술 등을 국산화, 반도체 생산 경쟁력 확보
- (연구기간) '21.4. ~ '25.12.
- (연구예산) 총 연구비 443.4억원(국고 324.5억원, 민간 118.9억)
- (과제내용) 반도체급 초순수 생산 주요공정(UV산화, 탈기막)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 100%, 핵심장비 70% 국산화, 운영기술 개발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국정과제	8,241	9,718	1,477	17.9

### □ 기대 효과

-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시설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및 관련 산업 육성

## 12. 신규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물이용기획과 서윤식 사무관, 044-201-7126)

### 사 례

'20년 7월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에서는 '20년 9월 '수돗물 위생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사고 대응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장으로 유충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 중이다.

'22년 7월 창원, 수원에서 유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종합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검토·보완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조치로 유충을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하여 매일 감시하도록 하고, 유충이 정수장 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수도꼭지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23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수도시설에 수도 꼭지로 유충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
  - 정수 공정 유출부 및 관로에 여과시설(마이크로 스트레이너, 여과망, 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하여 유충 유출을 물리적으로 차단
  - ※ 정수장 외부로부터 유충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既 추진중('21~'22년 2,188억원)
-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자체(특·광역시 30%, 시·군 50%)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	22,679	22,679	순증

### □ 기대 효과

-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에 유충 유입 차단에 추가한 유출 차단 조치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유충 사고 재발 방지 및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13.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신규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자원순환정책과 송관성 사무관, 044-201-7352)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12.2)에 따라 매장의 컵 반납 부담 완화 및 소비자 컵 반환 편의성 도모를 위해 공공장소 및 매장 내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필요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초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회용컵 무인회수기 집중 설치 필요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 추진
  - ※ (국정 과제(#89), '22.5)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 ○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공공장소(지하철·KTX역, 주민센터 등) 500개소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중 설치를 희망하는 매장 1,000개소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매장 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 등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8,750 공공용 - 500대×15백만원×보조율 50% 매장용 1,000대×10백만원×보조율 50%	8,750	순증

#### □ 기대 효과

-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편의성 제고 및 사업장 업무 부담 완화를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 최소화 및 컵 회수율 제고

## 14.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물환경정책과 정성남 사무관, 044-201-7004)

### 사 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유기성 폐자원은 '20년 기준 하루에 약 17만 톤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가스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나오는 메탄 혼합가스로 전기 발전, 도시가스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사업은 환경오염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며, 수소 생산까지 가능한 일석다조의 사업이다.

환경부는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22년도 지정한 4개소에 이어 '23년도에도 4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물환경 오염원 관리와 순환경제 실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개별 처리 중인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하는 모범사례 확산
  - ※ 통합시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증대, 설치·운영비 절감(20~30%) 효과
- (지원대상)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추진 지자체
  - ※ 계속 4개소 및 신규 4개소, 국고보조율 40~80%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1,200 4개소 조사비× 3억원	6,699 (계속) 4개소 설계비 x 13억원 (신규) 4개소 조사비 x 3억원 중합시스템 ISP 수립비 x 2억원	5,499	458

### □ 기대 효과

- 바이오가스 활성화로 탄소중립(메탄회수+화석연료 대체) 및 환경보전에 기여

## 15. (신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기후기금)

(물환경정책과 정성남 사무관, 044-201-7004)

### 사 례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운영하는 A 지자체의 ○○○ 담당자는 매년 약 1만 Nm<sup>3</sup>씩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 스팀 등으로 판매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수소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중 바이오가스가 수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Nm<sup>3</sup> : 온도 0도, 1기압 상태, 1입방미터의 기체량을 뜻하며 '노멀 입방미터'라고 읽음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는 탄소 발생이 없는 '그린수소'로서 EU에서도 그린수소로 인증받고 있으며, 미래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정보들을 기초로,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는 환경부와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새로운 사업모델로 추진한 후, 다른 바이오가스화 시설들에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유기성 폐자원(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청정수소 추출·활용

○ (지원대상)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

※ 지자체 1개소(보조율 70%), 민간기업 1개소(보조율 50%)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기후대응기금)	-	1,000 민간 1개소 설계비 x 5억원 지자체 1개소 설계비 x 5억원	1,000	순증

### □ 기대 효과

○ 바이오가스의 수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에 기여

## 16.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국립공원 탐방시설 정비)

(자연공원과 정석목 사무관, 044-201-7314)

### 사 례

국립공원은 지난 1967년 지리산을 제1호로 최근 태백산까지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우리나라 야생동식물 2만여종이 서식하는 자연자원의 보고이자, 연간 4,500만명의 국민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자연휴양 공간이다.

국립공원 주요 이용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야영장 등이 대부분 80~90년대 건립되어 노후화 되었으나 그간 기본적인 유지보수와 기본정비 수준으로 운영하였음.

이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 이용을 위해 이용객들의 수요트렌드를 반영하여 화장실(수유기저귀 교체 공간 마련 등), 주차장(하이패스 기능 추가 등), 야영장(편의기능 강화) 및 탐방안내소(전시콘텐츠 확대 등)를 리모델링하여 수준 높은 자연휴양을 체험하고 휴식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 사업 개요

#### ○ (사업내용) 국립공원 주요 탐방시설 정비 추진

- (화장실) 노후화장실 55개소 철거후 신축, 전면 리모델링 등(288억)
- (주차장) 노후 주차장 10개소 노면정비,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등(222억)
- (야영장) 야영장 3개소 영지 재배치, 면적 확대 및 편의휴양시설 강화(329억)
- (탐방안내소) 탐방안내소 4개소 전시콘텐츠 확충 및 멀티미디어 구현(85억)

#### ※ 27년까지 노후시설 완전 교체 및 리모델링 완료

- 화장실(~'27년까지 185개소), 야영장(~'27년까지 24개소), 주차장 (~'23년까지 31개소), 탐방안내소 (~'27년까지 14개소)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탐방시설 정비)	34,842	92,401	57,559	165.2

### □ 기대 효과

- 쾌적한 공원시설 이용을 통해 국립공원이 제공하는 수준 높은 자연휴양 서비스를 체험하고 휴식과 힐링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 17.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 (사육곰 몰수 보호시설,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

(생물다양성과 유정수 주무관, 044-201-7247)

#### 사 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사육은 그 동안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방치 논란, 연례적 불법증식, 끊이지 않는 곰탈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음에도 사유 재산인 관계로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한 끝에 '26년부터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하고 각 주체별 역할 분담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올 1월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몰수되거나 사육 포기된 곰 수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25년)하고 곰 사육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기업은 시민 모금이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사육곰 매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가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 보호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곰은 농가 책임 하에 관리돼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곰이 적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료비 등 유지 관리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 □ 사업 개요

- 곰 사육 종식('26년) 이행을 위해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이송하여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건립(구례, 서천 각 1개소)하고
  - 보호시설로 이송하기 전까지 농가에서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료비 등 유지관리비 일부 지원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사육곰 몰수 보호시설(구례)	750	3,500 시설 건설비용	2,750	367
야생동물 보호시설(서천)	900	7,600 시설 건설비용	6,700	745
곰 사육 포기 농가 유지관리		215 사료비	215	순증

#### □ 기대 효과

-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관리 가능한 시설에서 인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의 곰 사육에 따른 사회적 논란 근본적 해결

## 18.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기후기금)

(기후경제과 정상필 사무관, 044-201-6595)

### 사 례

-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EU 탄소국경세(CBAM) 도입, RE100 확대 등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감축 설비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지원설비) 연료전환 설비, 인버터·공기압축기·고효율기기 등 공정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열회수이용 설비 등
- (운영체계) 환경부 총괄, 한국환경공단 위탁(공모·선정)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97,902 (99개소)	138,842 (140개소)	40,940	41.8

### □ 기대 효과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탄소중립에 기여

## 19.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기후기금)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등)

(신기후체제대응팀 김승현 사무관, 044-201-6957)

### 사 례

- 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09년부터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전기·수도·가스)와 비상업용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 중이다
- 또한, '22년부터는 공과금 납부주체와 자동차 소유주만 참여할 수 있었던 기존의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신설하였다
- 향후 자원순환,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추가하고 참여기업을 늘리는 등 제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 사업개요

- (개요) 가정·상업·아파트단지 등의 에너지 절감률,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률과 일상 속 탄소중립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상품, 미래세대 실천
- (인센티브) 에너지·수송·친환경소비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과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에너지) 가구별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과 현시점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5% 이상 감축 시 지급(연 최대 10만원)  
※ 에너지 감축 여력이 높은 상업시설의 경우 연간 최대 40만원 지급
  - (수송) 과거 누적 일평균 자동차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기간 동안의 누적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률에 따라 지급(연 최대 10만원)
  - (소비) 인센티브 지급대상 탄소중립실천 활동(이용건수 등)에 대한 개인별 누적 실적에 따라 지급(연 최대 7만원)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15,096	23,988	8,892	58.9

### □ 기대 효과

- 탄소중립 인센티브 제도 강화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제고 및 국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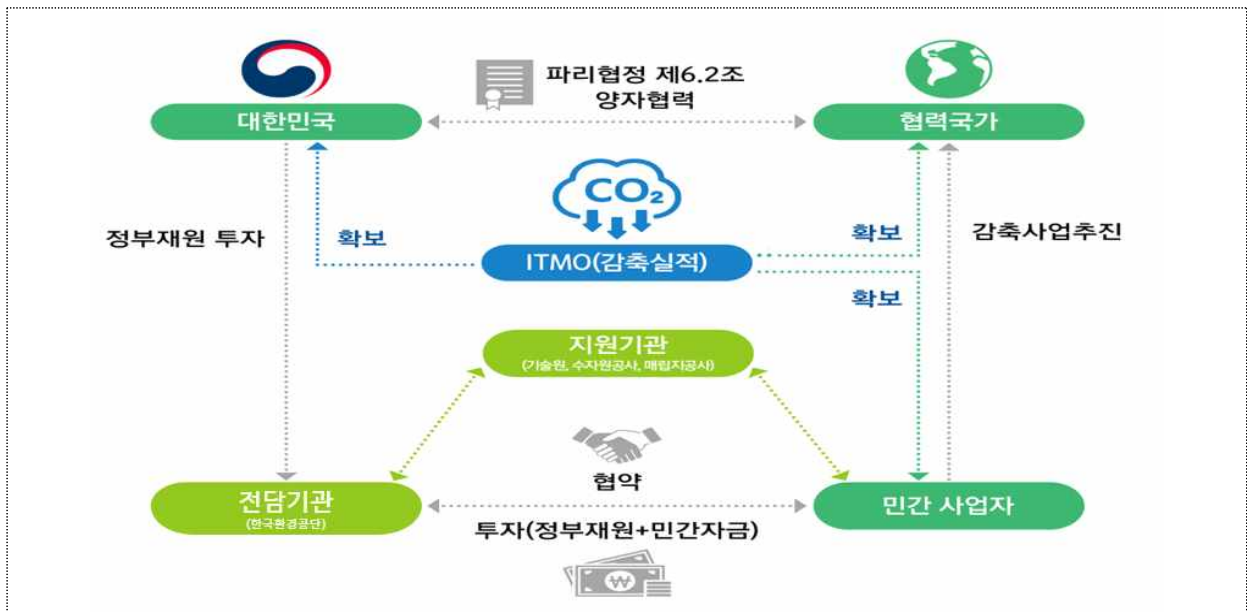
## 2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후기금)

(기후변화국제협력팀 김도훈 사무관, 044-201-6606)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환경분야에 대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30년에 국외감축분 약 33.5백만톤 확보 목표 설정
- (추진방식) 정부가 국내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사업비(설비 투자비, 운영비 등)를 투자하고, 확보된 감축실적을 획득하여 NDC에 활용

< 환경분야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 >



### □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예산(A)	'23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B-A)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10,350 (4개 사업)	10,350	순증

### □ 기대 효과

-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기반 마련 및 감축실적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전지구적 탄소중립에 기여